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 론	1
II.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인식	3
III. 일·중 관계의 협력과 쟁점	9
1. 과거사 문제	9
2. 영토 문제	11
3. 군사력 증강 문제	14
4. 경제분야에서의 잠재적 갈등	18
IV. 일본의 신군사안보전략	21
1. 신방위대강의 책정	22
2. 미·일동맹 강화	30
3. 주변사태법	36
4. 남방방위	41
5. 군사력 강화	43
V.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55
VI. 결 론	59
참고문헌	67
최근 발간자료 안내	69

## 표 목 차

<표 IV-1> 일본 주변 유사시 미·일협력 주요 항목 .....	35
<표 IV-2> 신방위대강: 자위대의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	45
<표 IV-3>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 주요 장비의 정비 규모 .....	50

# 서론

# I

1972년 이후 소련에 대한 견제를 공동인식으로 하는 미·중·일 관계는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으로 나타났다. 중·일 관계는 1970년대가 밀월관계라면 1980년대는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면서도 과거사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1985년 나카소네(中曾根) 수상은 일본의 역대총리로는 처음으로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함으로써 중국정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군비증강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경계론이 부상하였다. 일본은 냉전 종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두 자리 수로 군비를 증액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sup>1</sup> 1995년 중국은 일본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5.18, 8.17)하고, 황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10.16)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무상원조 동결조치를 취

---

<sup>1</sup> 일본은 1993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군현대화를 진행하면서 남사군도(南沙群島), 서사군도(西沙群島)를 거점으로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Hadeo Sato, "Japan's China Perceptions and its Policies in the Alliance with the U.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arch 1998. 18~21.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새로운 안보위협 국가로 인식하였다.

하였다.<sup>2</sup> 1996년 초에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측 활동에 대해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998년 중·일 관계는 과거사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갈등이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적용범위에 대만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중국측의 반발이 지속되었고, 아울러 언제라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경제부문에서는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 일본의 지도자들은 경제적 원조와 무역, 투자 등을 통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보다 온건하고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취하도록 유도해 왔다. 그러나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최근 일본경제의 침체는 일본 지도자들로 하여금 중·일 양국의 균형을 고려하게 하였다.

최근 중국의 군사력 근대화 정책은 비록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병력의 장거리 파병을 지향하고 있어서,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주변국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미·일동맹 강화와 신가이드라인, TMD 공동개발과 함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하여 중국에게 위협으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최근 중국의 정치·안보 역할 확대와 군사력 증강에 따른 일본의 안보의식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중·일 관계의 마찰요인을 분석하고, 셋째로는 이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 강화정책을 검토·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정책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하기로 한다.

---

<sup>2</sup>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9, 30, 1997.

##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인식

냉전체제의 소멸은 동북아시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복잡한 구도로 표출되고 있다. 일본은 탈냉전과 그에 따른 세계적 규모의 극적인 안보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영토문제, 민족문제, 분단문제, 민주화 및 체제문제 그리고 과거사 문제 등이 미해결로 남아있어 지역안보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안보의 이중적 성격은 중·일 상호간에게 잠재적 안보위협을 인식시켰으며 군사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중국은 1989년의 천안문 사태를 통해 체제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역분쟁의 가능성은 한층 증대되었으므로 국지적 도전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체제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익의 보호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천안문 사태를 통해 입지를 굳힌 중국의 군부는 걸프전을 겪으면서 첨단과학 기술에 기초한 중국군의 근대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 때 이후 중국의 군사비는 두 자리 수 증가를 지



속해 오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는 '6·4 천안문사건'이 일어난 1989년의 인민폐 251억 여 위엔이었는데, 이는 1988년에 비해 15.35% 증가된 것이었다. 1992년에는 1991년에 비해 14.40%, 1993년은 1992년에 비해 12.69%이었고, 1994년은 29.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sup>3</sup>

최근에도 중국의 국방비는 2001년 17.7%, 2002년 17.6%, 2003년 9.6%, 2004년 1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sup>4</sup> 이러한 국방비의 증가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이미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sup>5</sup>

최근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면서 '인력자원의 확보, 조화로운 사회환경, 국방건설' 등의 평화굴기(平和掘起)라는 새로운 전략을 표명하였으며, 막강한 국방력은 평화굴기 외교와 조국통일의 필수전제로 보고 있다.<sup>6</sup>

중국은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하여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의 도서지역과 다오위다오(釣魚島)를 중국령으로 확정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정책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게 될 세력공백을 자신이 메우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러시아에서 수호이 27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해·공군력 현대화를 통해 원거리 투사능력을

<sup>3</sup> 오규열, 『중국군사론』 (서울: 지영사, 2000), pp. 131-132.

<sup>4</sup> 『중앙일보』, 2004년 3월 8일.

<sup>5</sup> IMF, *World Economic Outlook*, May 27, 1993.

<sup>6</sup> 평화굴기는 중앙당고 부교장인 정비젠(鄭必堅)이 2003년 10월 하이난성 보아오 포럼에서 거론한 새 전략이다.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본은 1993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군현대화를 진행하면서 남사군도, 서사군도를 거점으로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군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일본정부의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핵실험을 실시(5.15, 8.17)하고, 황해 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10.16)함으로써 역내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하였으며, 일본도 군사비를 증액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치·군사 대국화를 모색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에 항의, 1995년도 대중 무상원조액을 1994년도 제공액(78억 엔)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인도적 부문을 제외한 대중 무상원조 전면 동결방침을 전달(8.30)하였다. 이는 일본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일의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자원과 연료부족, 공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일본안보 및 아시아지역의 무기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1997년 9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이후 중·일간의 지역주도권 확보경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새 지침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유사개념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지침이 일본 단독 유사(즉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미·일 협력방안)였다면 새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를 주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펼치는 중심무대가 한반도 및 대만해협 등 주변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물론 양측은 최종 합의서에 일본 주변 유사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6월 중간보고 발표 이후 ‘일본 주변 유사’에 대만해협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 방위관계자들은 이미 내부

적으로 한반도, 대만해협 등을 주변 유사지역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바뀌었다. 이는 자위대 주력군을 북방에서 규슈·오키나와 등 남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방위 전략이다.<sup>7</sup>

일본은 2001년 5월에 2020년을 예상하여 「일본 안전보장에 관한 보고서」<sup>8</sup>에서 동아시아 국가간에 경쟁의식이 강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내셔널리즘이 대두할 우려가 강하다면서 중국을 지적하였다. 즉 중국은 19세기 유럽에 있어서 독일 같은 존재라면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로 지목하였다.

중국은 과거 역사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수시로 과시하여 왔다. 예를 들어 1979년 등소평은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를 침공한 베트남을 응징하기 위해 교훈을 위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인민해방군(PLA)을 파견한 바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1975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Paracel섬에서 베트남을 축출하였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저지하였다.<sup>9</sup> 1995년 7월과 1996년 3월에 중국은 대만에서 실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에 자국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고 일본은 인식하고 있다.

---

<sup>7</sup> 『日本經濟新聞』, 2001년 8월 6일.

<sup>8</sup> 위의 신문.

<sup>9</sup> 김성철, “일·중관계의 쟁점과 추이,” 『세종정책연구』 2001-9, pp. 29-30; 『중앙일보』, 2004년 3월 26일.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현재도 벌이고 있으며, 양국 외에 브루나이, 필리핀, 대만 등 6개국이 석유와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은 중국의 무력사용 의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일본은 탈냉전이후 동아시아에서 영토문제, 민족문제, 분단문제 및 체제문제 등이 잔존하고 있어서 지역안보환경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였으나, 1993년 이후 중국이 군의 현대화, 특히 남사군도, 서사군도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군의 작전범위를 확대하면서, 일본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우려와 더불어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일본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대상은 북한이다.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괴선박 영해 침범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자위대와 일본방위청은, 이미 북한을 선제 기동타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은 미국에서 발생한 2001년 9·11 사건을 계기로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군사력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과 한반도정세의 불확실성의 증가를 빌미로 우경화된 분위기 속에서 보통국가를 외치며 헌법개정을 유도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 일·중 관계의 협력과 쟁점

### 1. 과거사 문제

중국은 일본이 만주사변(1931)등 중국대륙을 침공하여 3,5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을 사망내지는 부상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0</sup>

중국은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침략전쟁을 반성 및 사과하고, 신뢰 속에서 정상적인 중·일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였지만, 그 강도가 중국인이 당한 치욕에 미흡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중·일 관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쟁배상문제와 관련, 중국정부는 중·일 공동성명 당시 국가배상은 포기하였으나 개인보상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책임있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종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sup>11</sup> 그러나 일본정부

<sup>10</sup> 『人民日報』, 1996년 4월 1일; “China Calls on Japan to Curb Militarists,” *Japan Times*, July 8, 1997.

<sup>11</sup> 『동아일보』, 1996년 4월 12일.

는 배상문제와 관련, 중국이 대일전쟁포기 청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배상은 물론 민간인의 배상도 종료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중·일 관계를 긴장시켜 왔다.<sup>12</sup>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총리가 정부 각료들을 대동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일부 내각관료와 국회의원들도 참배에 동참하였다. 1996년 11월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橋本) 총리가 江澤민에게 「야스쿠니신사」를 다시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한 중·일간 마찰이 일단락된 듯이 보였다.

고이즈미(小泉) 일본총리는 2004년 3월 27일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자기 나라 전몰자를 추도하는데, 왜 외국인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직도 이상하기 그지없다”고 발언하였다.<sup>13</sup> 또한 고이즈미는 매년 한 차례씩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sup>14</sup>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행위는 정교분리(政教分離)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법원(후쿠오카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sup>15</sup> 이번 판결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참배가 왜 헌법위반인지 모르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참배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치가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하는 것이다.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는 2004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sup>16</sup>

---

<sup>12</sup> 東京에 위치해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1869년에 설립된 「招魂社」가 1879년 개칭된 것으로서, 1931년 일본의 중국침략 이후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일본정객들이 참배를 해왔던 곳이다. 이곳에는 2차 대전 당시 대외침략을 수행하였던 1급 전범들의 영혼이 안치되어 있다.

<sup>13</sup> 『讀賣新聞』, 2004년 3월 28일.

<sup>14</sup> 『朝日新聞』, 2004년 3월 28일.

<sup>15</sup> 『毎日新聞』, 2004년 4월 8일.

중국정부는 고이즈미의 잇따른 신사참배와 관련, 당분간 일본총리의 중국방문을 거절하기로 요청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sup>17</sup>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2004년 3월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열리고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기자가 일어나 “중·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했다.李 부장은 우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과거의 발언 수준을 유지했다. 그는 질문한 일본 기자를 향해 “과거 침략을 자행한 일부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두 해낸 역사적 숙제를 왜 유독 일본만 못하고 있는지, 일본으로 돌아가 당신네 지도자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주문했다. 그는 “역사문제에서 정의감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남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18</sup>

## 2. 영토 문제

조어도(釣魚島: 중국명 다오위다오, 침각열도, 尖閣列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와 관련한, 중·일간의 갈등은 1990년대 들어와서 양국의 민족주의화와 우경화추세로 인하여 첨예화되었다. 센카쿠열도 영유권문제는 일본 오키나와가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을 당시까지만 해도 중·일 관계에 현안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1971년에는 미·일 양국이

<sup>16</sup> 『조선일보』, 2004년 4월 24일 보도에 의하면, 아사히신문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일본국민들의 70%는 그가 계속 집권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sup>17</sup> 『조선일보』, 2004년 2월 17일.

<sup>18</sup> 『朝日新聞』, 2004년 3월 7일; 『중앙일보』, 2004년 3월 8일.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센카쿠열도를 반환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 오키나와의 실효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1972년 9월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일본과 잠정 합의하고, 1978년 8월 「평화우호조약」 체결 당시에도 일본측에 이 문제해결을 후대에 맡기기로 제의함으로써, 다오위다오 문제로 인하여 중·일 관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국은 다오위다오 문제의 분쟁을 접어두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하자고 제의해 왔으며, 중·일 외무장관은 1996년 11월 마닐라에서 회동을 갖고 다오위다오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였다.<sup>19</sup> 중국은 다오위다오 문제가 악화될 경우 중국 국민들의 대중시위를 초래하여 내내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 지역국에게 중국위협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고, 대만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분쟁을 덮어두고자 하였던 것이다.

중동지역으로부터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전체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 해로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다.<sup>20</sup> 남사, 서사군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주변의 군사적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은 판단하기 때 문이다.

최근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 대한 공동개발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남사군도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센카쿠섬을 자국의 영토

<sup>19</sup> 『한국일보』, 1996년 11월 24일.

<sup>20</sup> Lam Peng Er, “Japan and The Spratlys Disputer,” *Asian Survey*, Vol. 36, No. 10 (October 1996), pp. 995-1010.

라는 전제하에 공동개발을 제기하고 있어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도 다오위다오섬은 중국의 영토로 해양자원에 대한 일본과의 공동개발은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2004년 10월 17일 “중국이 동중국해 양국 경제수역에 인접한 춘샤오(春曉) 가스전과는 별도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도 복수의 광구를 설정했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각료가 중국의 일본 EEZ 내 가스전 개발 움직임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을 중국의 확장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sup>21</sup>

다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은 양국 영해의 경계수역에 걸쳐 있으며, 중국이 2004년 9월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은 이 일대 가스전이 하나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이 일본측 EEZ가 들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측에 그 동안의 탐사자료 제공과 매장량 배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양국 영토로부터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일본의 EEZ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 대륙붕이 뻗어있다는 이유로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포함하는 수역의 양국 공동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총리의 계속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영토분쟁지역인 다오위다오에 대한 중국 활동가들의 상륙사건<sup>22</sup> 등으로 불거진 중국과 일본의 외교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외교상 관례를 깨뜨리고 일본 인사들과의 예정된 만남이나 접촉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측의 반발에 맞서 일본의 자민·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은 센카쿠열도 문제와 한국

<sup>21</sup> 『毎日新聞』, 2004년 10월 18일.

<sup>22</sup> 『朝日新聞』, 2004년 3월 25일, 중국운동가들의 상륙은 1996년 10월 이래 8년만이다.

과의 독도문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의원연맹’을 발족시킬 예정<sup>23</sup>이며, 센카쿠열도에 시찰단 파견을 검토 중이어서 문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3. 군사력 증강 문제

중국의 군비증강과 중국의 핵실험 실시 등은 일본의 중국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안보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는 1988년까지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다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방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6·4 천안문사건’이 일어난 1989년으로 이 해 중국은 인민폐 251억여 위안을 국방비로 지출하여 전 해인 1988년에 비해 15.35%가 증가하였다. 매년 중국 국방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1990년은 1989년에 비해 15.45%, 1991년은 1990년에 비해 13.78%, 1992년은 1991년에 비해 14.40%, 1993년은 전년 대비 12.69%, 그리고 1994년은 무려 29.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sup>24</sup> 최근 중국의 국방비는 2001년 17.7%, 2002년 17.6%, 2003년 9.6%, 2004년 1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sup>25</sup> 2003년 9.6%의 증가율은 14년 만에 한 자리 수 증가율인데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위협 등 아시아패권추구라는 의심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1985년 294억 1,400만 달러였던 국방비를 1999년에는 398억

<sup>23</sup> 일본중의원 안보위원회, 센카쿠열도 ‘영토보존’ 결의. 『讀賣新聞』, 2004년 3월 30일.

<sup>24</sup> 오규열, 『중국군사론』 (서울: 지영사, 2000), pp. 131-132.

<sup>25</sup> 『중앙일보』, 2004년 3월 8일.

8,900만 달러로 35.6%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411억 6,700만 달러로 다시 3% 증액하였다.<sup>26</sup>

중국은 1985년에 적을 유인하여 해안지대에서 섬멸한다는 수세적 개념의 ‘근해해상방어전략’으로 해군전략을 바꾸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89년에 중장기 차원의 ‘3단계 해군전략 증강방안(三段階海軍軍力整備方針)’을 마련하였다. 즉, 제1단계(1989~2000)는 신예 미사일과 전사장비로 무장한 작전함정의 건조에 중점을 두고, 제2단계(2001~2002)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배수량 2~3만 톤 규모의 중형(中型) 항공모함의 구비를 목표로 하며, 마지막 3단계(2021~2040)는 러시아 해군 나아가 미 해군의 원양작전능력에 버금가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이었다.<sup>27</sup>

탈냉전시대 들어 중국은 근해 적극방어 및 원양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구축함,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의 전략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0년 8,500톤급 러시아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을 도입하여 실전 배치하였으며, 러시아와 2척의 추가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이면 총 4척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구축함들은 미국의 이지스함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 외에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원양 해군으로서의 확실한 전력 확보를 위해 항공모함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정책과 관련하여 퇴역한 호주제 Melbourne호(1985년), 소련제 Minsk호(1998년)와 Kive호(2000년), 건설 중이던 소련제 Veryag호(19998년) 등의 해외도

<sup>26</sup>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p. 3001. 일본은 1985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방위비를 318.5억 달러로부터 403.83만 달러로 약 27% 증가시켰고, 나아가 2000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0% 가량 늘어난 444억 1,700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sup>27</sup> 張雅君, “中共與美日的亞太海權競爭：潛在的衝突與制度性競爭機制,” 『中國大陸研究』, 第41卷, 第5期 (1998.5), p. 10.

입 및 활용 가능성, 스페인이나 프랑스로부터의 신형 항공모함의 해외도입 모색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중국의 자체적인 항공모함 생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sup>28</sup> 그러나 일부자료는 중국이 2005년경이면 벌써 항공모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SU(수호이)-27, SU-30MKK 등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 주변국에 대한 공격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신형 Y-8 조기경보기도 배치할 예정이다. 비밀리에 자체개발한 최신예 J(젠)-10 전투기 10대를 최근 난징군구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도 했다. 중국군 최고 지휘관으로 창군 이래 육군이 독점해 온 총참모부에 최초로 해군 및 공군 출신이 부총참모장으로 임명된 것도 해·공군 위상강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다.<sup>29</sup>

전체 병력의 75%가 넘는 170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 지상군은 신속대응 능력 확보에 변화의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 지상군 병력의 20~25%가 신속대응 능력을 갖춘 ‘쾌속반응부대(快速反應部隊)’다. 국지전 발생 후 30일 이내에 약 6만~8만 명의 신속대응군을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의 군비증강 목표를 자신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아·태지역에서 독자적인 패권을 추구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은 1994년에 중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히로시마 아시안 올림픽에 대만의 부통령을 초대하였다.<sup>30</sup> 일본은 1995년과 1996년에 중국이 전 세계적인 핵실험유

<sup>28</sup> Ian Storey and Yon Ji, “China’s Aircraft Carrier Ambi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LVII, No. 1 (Winter 2004), pp. 77-93.

<sup>29</sup> 『조선일보』, 2004년 8월 28일.

<sup>30</sup> 최운도, “21세기 일·중 관계의 전망,” 『일본연구논총』, 제13호 (여름호, 2001), p. 160. 1994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응발언과 강경자세가 빈번해졌다.

에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시하자 정부개발원조(ODA)를 중단하였다.

일본은 중국이 1992년 영해법 제정에 이어서, 1993년 서사군도에 설치한 임시 활주로를 ‘수호이-27’기종 이상의 전투기와 전폭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군함정박시설을 해군기지로 개조<sup>31</sup>한 데 대해서, 이러한 활주로와 군함정박시설로 서사군도에서 남사군도 및 센카쿠열도까지 작전반경이 확대되었다고 보고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1997년 6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2차 중간보고 안에서 미·일은 일본 유사시 주변지역의 범위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및 센카쿠열도의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확대 정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게 위협요인<sup>32</sup>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방위백서는 1990년 말부터 중국을 위협국가로 꼽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 미국은 이미 2001년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했으며 일본도 2004년도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였다.<sup>33</sup> 또한 2004년 말 개정예정인 방위계획대강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군사적 위협대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sup>34</sup>

<sup>31</sup> 吳建德, 『中國威脅論』(臺北: 五南圖書出版公司, 1996), p. 166.

<sup>32</sup> Ming Zhang and Ronald N. Montaperto, *A Triad of Another Kind: The U.S., China and Japan* (N. Y.: St. Martin's Press).

<sup>33</sup> 『조선일보』, 2004년 8월 28일.

<sup>34</sup> 『조선일보』, 2004년 10월 19일.

#### 4. 경제분야에서의 잠재적 갈등

중·일 관계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정경분리로서, 많은 갈등관계 속에서도 경제교류는 지속되어 복합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문화적 공통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상품수출시장과 투자유치대상으로서 일본을 주요한 교류대상국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 역시 중국의 생산기지 및 광활한 시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1978년 국교정상화시 10억 달러였던 일·중간 무역액은 1979년 69억 달러로 증가하고, 2000년에는 700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은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중국도 일본의 제2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1979년에 시작된 일본의 중국으로의 ODA는 1999년 말 누계 2조6천8백8십3억 엔에 달한다. 일 년 기준 공여금은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1, 2위를 차지한다. 일본은 이 당시 대중경제협력3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중원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구선진제국과의 협조를 모색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제국들과의 균형에 주의를 기울이고, 군사협력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35</sup> 자민당 내에서는 대중원조가 군사비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비판론도 존재하였다.

1998년 8월 타케시타 총리의 방중 당시 일본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일·중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보호협정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 타케시타 총리는 1990~1995년에 해당하는 제3차 엔 차관으로 42개 프로젝트에 대한 8,100억 엔의 지급을 약속했다. 이것은

<sup>35</sup> 손기섭, “일본 가이후 내각의 제3차 대중 엔차관 협력의 동결해제 결정,” 2001년 춘계학술대회 (공동주최: 한국재향군인회, 한미안보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p. 3. 재인용; 第88回国會衆議院會議錄 第4号, 『國務大臣の演說に對する竹入義勝君の質疑』, 昭和 54年 9月 6日, p. 67.

1984년에서 1989년까지의 제2차 차관총액 4,700억 엔(16개 프로젝트 대상)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였다.<sup>36</sup> 또한 당시까지의 차관대상 프로젝트가 대부분 철도나 항만 같은 인프라정비에 국한된 데에 반해, 제3차 차관은 지역발전과 농업진흥에도 비중을 두어 화학비료공장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1991년 4월에 일본은 ODA(정부개발원조) 4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①군사비 지출, ②대량살상무기 개발, ③무기 수출, ④민주화 및 기본적 인권에 있어서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에게만 제공한다는 것이다.<sup>37</sup> 일본은 1996년에는 수혜국에게 사용용도와 내역 밝히기를 촉구함으로써 외교정책 수단으로써의 적극적 활용의지를 내비쳤다. 1995년과 1996년의 중국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이 엔 차관의 동결을 발표한 것이 그 실례가 될 것이다.

2000년 10월에 주룽지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청하였다. 주룽지 총리의 방일 목적은 일본이 ODA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본국민의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역사문제는 뒷전에 놓이게 되었다. ODA와는 별도로 무역문제도 논의되었는데 일본과의 교역규모가 6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에 있어 일본은 주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의 경제상황은 크게 호전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1993년에 이미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sup>38</sup> 2003년의 중국 GDP의 성장률은 9.1%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sup>39</sup> 일본이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일본 국내

<sup>36</sup> 김성철, “일·중 관계의 쟁점과 추이,” p. 20.

<sup>37</sup> 鈴木宗男, 『世界が變わる日本が變わる』(東京: 講談社, 1992), p. 83.

<sup>38</sup> *World Economic Outlook*, May 27, 1993.



에서는 비판론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거품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에 있어서도 일본에 커다란 적자 누적으로 경제가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sup>40</sup>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일의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자원과 연료부족, 공해 등 환경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 안보 및 아시아의 무기경쟁을 초래하므로 일본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비판론의 초점은 안보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중국의 정책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sup>41</sup> 이것을 분석한다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건전한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들은 민주화를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민주화는 군사력 증강보다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가정이 중국의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은 비판하는 것이다.

일본의 통상백서(2001)에 의하면, 일·중간의 갈등은 기술이전문제와 수입제한조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높은 생산성과 구매력, 우수한 기술력, 산업집적조건 등이 갖춰져 세계 2위의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했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정보기기산업과 첨단산업분야에서 일본과 경쟁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sup>39</sup> 『중앙일보』, 2004년 3월 30일.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억원)	67,795	74,772	79,553	82,054	89,000	95,800	102,000	116,694
실질GDP 증가율(%)	9.7	8.8	7.8	7.1	8.0	7.3	8.0	9.1

<sup>40</sup> 일본은 자국의 경기침체, 산업공동화, 무역흑자 감소 등 경제난제의 근원이 중국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140억~250억 달러씩 대중국 무역적자를 봤다고 발표해 왔다. 지난해에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181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4년 11월 5일.

<sup>41</sup> Michael J. Green and Benjamin L. Self, "Japan's Changing China Policy: From Commercial Liberalism to Reluctant Realism," *Survival*, Vol. 38, No. 2 (1996), pp. 35-38.

## 일본의 신군사안보전략

일본의 군사안보 전략을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1995년의 「신방위대강」과 1997년의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은 탈냉전과 그에 따른 세계적 규모의 안보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은 1995년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를 골자로 신방위대강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구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1997년에 완성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유사개념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지침이 일본 단독 유사(즉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미·일 협력방안)였다면 새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를 주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펼치는 중심무대가 한반도 및 대만해협 등 주변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향후 대만사태

의 진전은 중·일 관계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토(京都)대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교수는 “미·일동맹에서의 중국 변수”란 주제발표(동아시아 연구저널)를 통해 일본이 21세기의 새 경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그는 “1996년 미·일 신안보선언과 뒤이은 미·일 방위 협력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1993년 한반도 위기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급부상하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일본처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균형자·안정자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중 관계는 계속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sup>42</sup>

외교·안보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한 부시 행정부로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인 중국을 억제하는 데 미·일동맹은 필요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 1. 신방위대강의 책정(策定)

일본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새 방위 계획 대강(1995.11.28)은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기본적 방위력구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①미·일 안보체제의 유지·강화, ②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③자위대 규모 축소, ④AWACS(조기경보기) 4대 도

<sup>42</sup> 『중앙일보』, 2001년 8월 9일. 동아시아 정치학자들은 동아시아 연구저널(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의 제3집 ‘중국과 동아시아’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2001년 8월 4일에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입 등 질적인 전략은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8년 구(舊)대강에서는 미·일 안보체제를 “일본에 대한 침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 그 역할을 자국 방위에 국한했었다. 그러나 신대강에서는 “미·일 안보체제가 일본은 물론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보장환경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개정했다. 이는 미·일 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일본의 자국방위라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일 양국은 냉전 종결, 소련의 해체, 미·일경제의 역학관계 변화 등 미·일 안보체제를 둘러싼 냉전환경에 이어서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선 러시아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일본과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후의 미·일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일 안보체제는 소연방 해체 이후 최대의 잠재적 라이벌인 일본의 독자적 군사노선 내지는 패권국 추구를 막는 효과적인 틀이라는 점이다.

둘째, 미·일 안보체제의 글로벌화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체제의 목적을 일본 단독방위에서 아·태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축으로 전환하는 ‘뉴비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뉴비전은 옛 소련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미·일 안보체제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지역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셉 나이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는 최근 냉전종결 등의 전

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자간 안보체제에 관한 미국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독자적 노선을 다자간 안보의 틀 속에서 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3</sup>

셋째, 냉전 후 미국의 중대한 이익인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에 있어 위협세력은 현재 중국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중 연계일 것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과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의도는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sup>44</sup> 미국으로서 미·일 안보체제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라이벌인 일본을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로 미국이 일본내 기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미·일 안보 재조정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일본은 주권국으로서 대외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할 것이며, 특히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에 합당한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 사고는 첫째, 미·일동맹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미·일 안보체제를 유지하되 지역주의와 유엔 중심을 강조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자주성을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대강의 내용 중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다각적 안보’ 개념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PKO를 비롯해 동남아시아국제연합

---

<sup>43</sup> Joseph Nye,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Vol. 89, Winter 1992-1993, pp. 96-115.

<sup>44</sup> 남지나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Hisahiro Kanayama, "The Future Import of Energy Problems in China," *IIPS Policy Paper*, 124E (June 1994), pp. 5-23.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 해군의 수빅灣 철수와 극동 소련 함대의 캄란기지 철수를 계기로 초래된 힘의 공백을 중국 해군이 메우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大洋海軍」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남사군도를 비롯한 대서양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ASEAN), 아시아지역포럼(ARF) 등의 회원 국가와 다각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이론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 왔다.

일본은 아·태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중국·러시아 등 지역국가들과 양국간의 군사교류를 넓혀 상호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아시아 각국으로 연계시키는 지역중심의 다자간 안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와 같이 역할 확대 전략의 전개에 따라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 체제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역내 국가들로부터 군비증강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을 제고시켜 보다 자주적 입장에서 안보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새 방위계획 대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종전과 같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PKO 참여, 대규모 재해와 테러에 대한 대응 등 일본의 국제적인 군사공헌 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냉전구도의 붕괴에 따라 옛 소련의 위협을 삭제한 반면 한반도와 중국을 최대 위협요인으로 규정했다.

일본 방위청은 다양한 사태의 내용으로 “일본에 대량 난민이 도래할 경우, 재외국민의 긴급피난, 부유기뢰(浮遊機雷), 국제연합이 경제제재를 결의한 경우”를 상정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유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자와 등이 주장하는 논의들은 미·일 안보체제 강화라는 틀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미·일 안보협력 과정에서 전문적인 군사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방위청 등 군사전문가의 영향력이 확대되

고 일본의 우경화 현상으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1995년 11월 28일 확정된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병력과 장비의 대폭 삭감과 장비의 하이테크화와 무기의 합리적 운용 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이 양에서 질 지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방위정책<sup>45</sup>은 자위대 병력을 정월 18만 명에서 16만 명(예비역 1만 5천명, 상비정원 14만 5천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육상자위대는 12개 사단에서 8개 사단으로 줄어들었으나 헬기공수여단이 신설되어 전력손실을 보강했다.

전차나 대포 등 전투중심장비는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를 새로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10년에 걸쳐 삭감한다. 전차의 경우, 구형인 61식 전차를 중심으로, 현행 1,200대 중 300대 정도를 삭감하였다. 61식 전차는 관동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에 관동지방의 부족분은 북해도로부터 신형 전차를 갖고 와서 메우기로 하였다.<sup>46</sup>

아울러 1,500만 명 규모의 ‘즉응 예비자위관’이라는 동원 예비군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태까지도 ‘예비자위관’(4만 6천명, 훈련 연 5일)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임무가 기지 경비 등 후방지원업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발하여 전선작전이나 게릴라 행동(가령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의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훈련도 현행의 연 5일에서 21일로 증가시켰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정수를 60척에서 5척으로, 소해정선단을 2개 부대에서 1부대로, P-3C 대잠함초계기를 100대에서 80대로 각각 감축했

<sup>45</sup> 『防衛白書 1996』, pp. 73-134.

<sup>46</sup> 『朝日新聞』, 1995년 5월 23일; 『防衛白書 1996』, p. 123.

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비인 잠수함은 16척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P-3C의 레이더를 강화한다든지 영상 전송장치를 갖추는 등 잠수함의 추적뿐만 아니라 수상 감시능력도 증대시키기로 하였다.<sup>47</sup>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350대에서 300대로 줄이는 대신 공중조기경보기(AWACS) 4대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1995년 말 운용되고 있는 주력 전투기 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행기는 F-15이다. 이러한 세계 최강의 요격전투기 F-15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그 밖에 사우디아라비아가 30대, 이스라엘이 21대 보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1995년 말 현재 이를 185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최종적으로 210대 도입 예정, 참고로 미국은 820대 보유), 한 편대에 F-15를 24대씩 배치시켜 요격전투기 부대를 7개 편대로 운용하고 있다. F-15는 1980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사용하던 F-4EJ(F-4의 개량형)는 점차로 퇴역하고 1995년에는 3편대 72대가 운용되고 있다(그 밖에 ‘예비기’로서 F-4가 50대 정도 있다).

이번 신방위대강에서는 F-15로 구성된 7개 편대는 그대로 두고, F-4EJ의 요격부대를 3개 편대에서 2개 편대로 1개 편대를 삭감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F-4EJ 1개 편대의 전투기와 예비기 일부(1개 편대의 전투기 수를 24대에서 22대로 감축)를 합쳐 50대 정도를 퇴역시킴으로써, 요격전투기 보유대수를 350대에서 300대로 줄이게 되었다(전투기의 총 수는 430대에서 400대로 감축).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오래된 기종의 전투기를 약간 줄이는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는 요격전투기 능력이 전투기 숫자만큼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10개 편대 중 1개 편대(新田原 소재)를 삭감한다는 자체는 그런대로 군비축소의 제스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알기 쉽게 단순화시키면 요격전투기 부대의 능

<sup>47</sup> 『朝日新聞』, 1995년 5월 24일.



력은 100에서 95정도로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F-15의 도입은 이미 달성되기는 하였으나, 1996년부터의 5개년계획에서는 제조능력 유지와 소모분의 보충을 위해 F-15(정확히 말하면 F-15DJ)를 4대 새로 도입하고, 1980년 초에 도입했던 초기 F-15의 성능 보충을 위해 개량작업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공중급유기이다. 그 당시 일본의 거의 모든 전투기나 수송기에는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일본 방위청이나 자민당측은 PKO 파견이나 비행훈련시 체공시간 연장을 위하여 공중급유기의 도입(4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회당과 사きが케측은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행동반경을 대폭 연장시키기 때문에 인접국가에 위협이 되는 등 전수방위(오로지 수비만 하는 방위체제)의 원칙을 넘어선다고 이를 적극 반대하였다. 결국 5개년계획에서는 공중급유기의 성능, 운용구상 등 공중급유기에 관해 검토하여, 결론을 얻어 대처한다고 일단 이 결정을 유보하였다.

공중급유기는 과거에도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일본의 전투기와 전폭기의 행동반경·체공시간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키는 관계로, F-15의 전투행동반경이 1,500km(항속거리는 4,600km)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 번이라도 중간급유를 받으면 행동반경은 3,000km 이상으로 증가되어, 한반도 전체는 물론 중국 내륙까지 전투반경을 넓힐 수 있게 되어 일본주변지역에 대한 무력행사를 충분히 가능케 한다.<sup>48</sup>

현재 방위청측이 공중급유기의 후보기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공군이 1990년 초에 도입하기 시작한 C-17기종으로, 이 기종은 원래 장거리 대형수송기이다. 방위청측은 이를 그대로 장거리 수송기로도 사

---

<sup>48</sup> F-15는 중국주력기 SU-27과 견주어지는 우수한 전투기이다. 『조선일보』, 2001년 8월 23일.

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기의 커다란 동체 안에 급유시설을 장치하여 필요할 때 공중급유기로도 사용하는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생각하였다.<sup>49</sup>

탈냉전시대를 맞아 자위대의 새 모습을 제시한 「신방위대강」에 따르면 재래식 무기를 과감히 축소했으나, 첫째, 해군력의 핵심인 잠수함부대의 현행 유지, 둘째, 헬기공수여단 등 기동부대의 증강, 셋째,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첨단장비 보강 등 군사력의 효율화를 통해 전력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본부 신설은 일본판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구축을 넘보는 자위대의 최대 야심작이다. 이는 ‘밖을 지향하는’ 자위대 변신의 신호탄이라고 보여진다. 신대강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전수방위개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고 군사력의 전진배치를 계속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신방위대강」은 선진국의 군비억제 경향, 국내의 정권교체, 그리고 재정사정 등 국내외 요인을 고려하여 외형적인 축소 방향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을 21세기의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전진화 및 해외파병 기동력 강화 및 현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구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sup>49</sup> 참고로 C-17은 75톤(완전군장의 공수부대원이면 약 240명, 보병이라면 약 320명 수용 가능)의 화물을 싣고 4,500km를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 일본의 전수방위는 유명무실해졌다.

## 2. 미·일동맹 강화

국제협조 또는 다각주의적인 안보협력과 미·일 안보협력을 양측으로 제시한 간담회의 보고서가 미·일 안보협력을 주로 내세운 신대강의 입장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미국의 영향, 구체적으로 나이(J. Nye) 국방차관보가 이끄는 그룹의 역할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한다.<sup>50</sup>

1995년 2월 28일에 작성된 나이 보고서의 특징은, 첫째, 이후 20년에 걸쳐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방위 능력으로 10만 명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방위능력의 유지와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미·일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의 다각적인 안전보장협력을 위해 대화의 촉진과 적극적인 의의를 정식으로 인정한 점이다. 미·일 안보관계의 재정문제도 워싱턴의 일방적인 이니셔티브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와타나베가 설명하듯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51</sup>

나이 이니셔티브가 일본 국내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으로는 군사적 현실주의자의 주장대로 자위대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걸프전쟁을 지적할 수 있다. 국민은 일본이 얼마나 위기에 약한 시스템인가 통감하였다. 따라서 당초에는 PKO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던 여론도 점차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일본국민은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처럼 군사적 현실주의의 입장은 미·일안보 재정의의 과정에서 점차 확대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6년 4월 하시모토 수상과

<sup>50</sup> 船橋洋一, “日米安安保再定義の全解部,” 『世界』 (1996.5), pp. 22-53.

<sup>51</sup> 渡邊沼夫, “日米安全保障關係の新展開,” 『國際問題』 (1998.3), pp. 24-25.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미·일 양국 국민에의 메시지: 21세기에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미·일안보가 극동의 범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신안보선언은 실질적인 안보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일 신안보선언 이후 자민당의 국방족<sup>52</sup> 및 자위대의 간부들은 신대강이 평화시에서 유사시로 이행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였고,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 신가이드라인을 작성하려고 하였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1996년 9월 19일 제1차 중간보고안, 1997년 6월 8일 제2차 중간보고안, 1997년 9월 23일 최종보고안이 확정되었다. 제1차 중간보고안은 미·일간의 협력사항을 ①평상시 협력, ②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③일본 주변지역 사태에 대한 협력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미·일은 최초로 극동이라는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으로 확장시켰다.

제2차 중간보고안의 특징은 새로운 범위의 일본 주변의 유사시에 대비한 공해 및 상공에서 미국과 자위대의 실효성에 역점을 둔 폭넓은 6개 분야의 40개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었다.<sup>53</sup> 최종보고안은 1차 보고안에서 합의된 평상시 협력, 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일

<sup>52</sup> 일본자민당의 정책심의기구인 정부조사회에는 부회(部會)라고 불리는 기관을 중심으로 보수당 의원과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이 연합형성되어 왔다. 부회장 혹은 보수당 의원은 관계하는 성청의 예산이나 정책 또는 법안을 그들의 의도대로 유리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족(族)의원이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국방족은 국방예산이나 정책 등을 유리하게 관장하는 국회의원을 말한다. 『日本經濟新聞社, 『自民堂政調會』(東京:日本經濟新聞社, 1983), p. 124.

<sup>53</sup> 防衛協力小委員會, 『日本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たに關する中間とりまとめ』(東京: 防衛廳, 1997), pp. 1-31.

본 주변유사에 대한 6개 분야의 40개 항목을 확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이 첨가되었다.

최종 방위협력지침과 1978년 제정된 방위협력지침<sup>54</sup>을 비교하면, 첫째, 평상시 협력은 침략미연방지인 데 반해 과거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보유하고 미국에게 시설을 제공한다.

미국은 핵억지력을 보유하며 즉각 대응부대를 운용·증원하고 미·일은 침략에 대비하여 작전·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것이다. 최종 협력지침은 일본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갖는다. 미국은 핵억지력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에 배치한 병력을 유지한다. 특히 정보교환과 정책협의를 위해 미·일 안보보장실무협의회(SSO)와 미·일 안전보장실무협의회(SSC)를 각각 설치한다. SSO는 미국 측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측에서 외무장관과 방위청장관이 참가하며 SSC는 일본측에서 외무성 북미국장과 방위청 방위국장이, 미국 측에서 국무차관보와 국방차관보가 참가한다. 이밖에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국제구호활동에 협력한다.

둘째, 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 즉 일본 유사시의 과거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한정적이며 소규모의 침략을 자위대로 격퇴하며, 자력으로 격퇴하기 어려우면 미군의 협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최종 협력지침은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미·일간 조정기능을 신속히 시작한 뒤 합의에 따라 준비된 선택단계에 의거, 준비를 진행한다. 무력공격을 당

---

<sup>54</sup> 미·일은 1970년대 후반 소련의 극동 및 인도양에서 해군을 증강(19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자 이러한 신냉전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위협력을 개시하였으며, 일본의 해상소송로 전략을 추진하였다. 극동유사의 경우 첫째, 미 해군은 위협의 대상인 극동소련의 해·공군기지를 공격하고, 둘째,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지원하며 소련함대의 3해협의 통과를 봉쇄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했을 경우에 일본은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기에 침략을 격퇴하고 자위대는 일본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방어 작전에 돌입한다. 미국은 일본에 적절한 협력을 제공하는 한편 자위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조치를 취한다.

셋째,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 협력에 있어서 과거 협력지침은 극동 지역에서 안전이 저해될 경우 미군의 병참지원에 대해 연구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을 뿐 구체적 협력사항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지침은 난민구호·이송, 피난민에 대한 응급물자지원 등 인도적 조치와 일본주변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난활동, 기뢰제거·선박검사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비협력에 있어서 미·일은 공동작전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력기준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메커니즘을 설치하고, 또한 유사시 백악관과 일본 총리공관을 잇는 핫라인이 연결되고 양국 수뇌부는 정보교환을 통해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신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일본의 군사역할 범위를 확대,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유사시에도 자위대가 일정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둘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처는 물론, 셋째, 미국과의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참여 명분을 주었다는 데 있다.

새 지침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유사개념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지침이 일본 단독 유사(즉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미·일 협력방안)였다면 새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를 주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펼치는 중심무대가 한반도 등 주변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물론 양측은 최종합의서에 일본 주변 유사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6월 중간보고 발표 이후 ‘일본 주변유사’에 대만해협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 방위관계자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을 주변유사지역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 주변유사시에 대비한 인도주의 활동, 일본 주변지역 탐색·구조 등을 골자로 한 방위지침 최종안 6개 분야 40개 항목 중에서, 특히 피난민 구조·이송, 주한일본인 철수, 기뢰 소해, 경제봉쇄 등에 따른 임검활동 등은 일본 함정과 군용기가 한국 영해·영공에 들어오는 근거가 되어 필연적으로 주권침해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8월에 일본방위청은 동북아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개발을 위한 미·일 공동기술연구를 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TMD가 해외미군을 방어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미국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명칭 대신 중립적인 탄도미사일방어(BMD)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국가미사일방어(NMD), TMD 계획을 유일하게 지지하고 있다.

<표 IV-1> 일본 주변 유사시 미·일협력 주요 항목<sup>55</sup>

분 야	구 체 항 목
인도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지로 인원 및 보급품 수송</li> <li>· 재해지로 의료, 통신 및 수송</li> <li>· 피난민 구조 및 이송, 응급물자지급</li> </ul>
수색-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수색, 구조, 정보교환</li> </ul>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경제제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검사(임검) 및 관련활동</li> <li>· 정보교환</li> </ul>
비전투원 피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교환</li> <li>· 자위대 시설 및 민간항만 공항의 사용</li> <li>· 일본인 입국시 통관, 출입국 관리 및 검역</li> </ul>
미국활동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급 등을 위한 자위대 시설 및 민간항만, 공항의 사용</li> <li>· 자위대 시설 등에서의 인원 및 물자의 하역장소 및 보관시설 확보</li> <li>· 자위대 시설 및 민간 항만, 공항의 운용시간 연장</li> <li>· 미항공기의 자위대 비행장 사용, 훈련장 제공</li> <li>· 자위대 시설 등에서의 물자(무기 탄약 제외) 및 연료, 유지, 유탄유 제공</li> <li>· 공해상의 미함정에 대한 해상수송, 미 함정, 항공, 차량의 수리 정비</li> <li>· 일본에 후송된 부상자의 치료·이송, 의약품 및 위생기구제공</li> <li>· 미군시설구역 주변해역의 경계 감시</li> <li>· 미·일 관계기관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 및 기자재 제공</li> <li>· 미 함정의 입출항 지원</li> </ul>
자위대와 미군의 운용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교환에 의한 경계감시체제의 정비</li> <li>· 공해상의 기뢰 제거</li> </ul>

<sup>55</sup> 『朝日新聞』, 1997년 9월 24일.



### 3. 주변사태법

1998년 4월 28일 각의에서 신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주변사태법안을 발의하였다. 관련법안은 일본 주변지역에서 유사(주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진압행동에 나서는 미군에의 지원내용과 실시과정을 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평화적 진보주의자(신민당)는 “헌법문제 등에서 의문점이 많고, 여당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주의자(자민당)는 “국내정치보다는 외교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민당의 저항을 무시하고 각의 결정을 추진하였다.<sup>56</sup>

주변사태법안의 비판은 주변사태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지역의 이미지를 없애면서 미군에 협력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투명한 후방지원에 대한 비판이다. 자위대의 수송협력의 장소가 되는 후방지역의 정의에 대해서도 “일본 영역 또는 전투행위가 행해지지 않고, 또한 활동기간 동안 전투행위가 행해질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후방지원의 개념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시 취할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성립(1998.5)시켰으며, 미국과 협력 범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2001년 4월에 출범한 고이즈미 정부의 대외노선도 ‘21세기의 정치대국화’ 대외정책 노선과 이를 위한 ‘지도력 분담’(power-sharing)을 지향한 미·일동맹 강화의 틀 내에서 추구될 것이므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 틀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한 상호주의(대북정책) 등에 적지 않

<sup>56</sup> 『朝日新聞』, 1998년 4월 28일.

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시 정부는 일본의 헌법 9조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변경하면서라도 미사일방어(MD)계획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바람직하며 군사비 부담이 늘더라도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변화하였다. 일본 정부·자민당이 당초 200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2년 앞당겨 작성하기로 한 데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등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sup>57</sup> 일본은 자위대의 주력군을 북방에서 규슈·오키나와 등 남방 지역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17% 늘이는 등 군비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일본 방위백서(2001)는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중국위협론과 맞물린 것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방위계획에는 일본이 미국과 공동 연구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계획이 구체화될 것에 대비, 육·해·공군 자위대에 중복되어 있는 지휘명령체계를 통합하고 조직·장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이 활발해졌으며, 2003년 6월 6일에는 전쟁 상황에 대비한 유사법제를 마련하였다.<sup>58</sup>

<sup>57</sup> 『日本經濟新聞』, 2001년 8월 6일.

<sup>58</sup>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개정안

최근 일본은 전쟁에 대한 유사 7개 법안을 국회(참의원)에서 2004년 6월 14일 통과시켰다. 2003년 6월 6일 통과된 유사 3개 법안에 이어 2004년 6월 14일 7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시를 대비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sup>59</sup>

일본신문들은 한결같이 이 법제로 일본의 안보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고 분석하였다. 물론 유사법제는 전수(專守)방위의 틀을 깨는 것은 아니다. 외부의 주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쟁포기 족쇄라는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것이다. 이 법제는 보수세력의 화두였던 ‘보통국가 일본’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안전보장 논의는 앞으로 북한, 미국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개헌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사법제란 2002년 4월 정부가 의회에 상정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일컫는다.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은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개념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일본에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등에는 정부의 각의에서 대처 기본방침을 결정, 총리를 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책을 강구한다. 총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가 원활히 활동하기 위해 민간의 협

---

등 3개 법안을 일컫는다. 일본에서 유사법제의 의미는 자위대가 갖고 있는 군사력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sup>59</sup> 유사 7개 법안은 전시에 미군이 원활히 활동하기 위한 미군 지원조치 법안, 자위대와 미군이 공항과 항만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미국과 일본이 물품과 역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 개정법안 등이다. 『朝日新聞』, 2004년 6월 15일.

력의무를 새로 규정한 것이 골자이다. 방위출동 발령 후 자위대에 의한 사유지 강제 수용이나 가옥철거 등을 가능하게 한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은 자위대, 방위청, 경찰청, 외무성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안전보장회의에 조언하는 ‘사태대처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일본의 경우 이런 내용들은 헌법에서 무력의 보유·행사를 포기하고 미국에 안보를 일임해 왔기 때문에 ‘법의 공백 상태’로 남아 있던 부분이다.

이 법제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전후 50년간 ‘유사’ 라는 것은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였다”며 “이 문제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를 본 것은 일본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사법제는 1963년부터 방위청 일각에서 소련의 일본 상륙을 상정하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군국주의 시대의 ‘전시 총동원 체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적 혐오감과 좌파야당의 반발이 강해 서랍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의 노동미사일 실험 발사, 1998년 대포동미사일 실험 발사, 2001년 9·11 테러에 이은 북한공작선 격침 사건, 2002년 10월 이후 북한 핵 위기, 중국의 군사위협, 이라크전 등으로 국민의 안보위기감이 고조됐다. 이 사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제정, 자위대의 주일미군 후방 지원을 강화한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미·일 합의 등 자위대의 미군 협력과 해외활동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미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국측은 유사법제 정비 다음 단계로 일본의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미·일 물품·용역 상호 제공 협정(ACSA)의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협력을 통해 일본 안보가 강화되면 될수록 동맹국

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과의 거리는 점점 커져 결국 개헌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은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伸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고 현지 사령관에 육군 대장을 보임할 계획이라고 한다.<sup>60</sup> 이는 한반도와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비, 주일미군기지를 아시아의 핵심기지로 격상시키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 전체의 유사사태에 대응하는 임무를 가진 미1군단이 일본으로 이전되고, 그 동안 소장 직급이 맡아온 주일 육군사령관에 이례적으로 대장이 보임된다면, 주일미군기지의 성격을 일본 방위는 물론 동북아의 유사사태에 대비하는 수준에서 중동지역까지를 시야에 둔 ‘중심(hub)기지’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 육군1군단이 일본으로 이전된다면 이는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쳐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일미군 사령부에 해체·흡수되고,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산케이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1만 4000명의 해병대 병력 중 일부를 홋카이도에 있는 육상 자위대 훈련장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sup>61</sup>

미국은 이와 함께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 도쿄의 요코다(横田)기지에 일본의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와 제2수송항공대를 이전해 달라는 제안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안은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 세계 미군 재편의 일환이며,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유기적 협력

<sup>60</sup> 『産経新聞』, 2004년 4월 21일; 『日本新聞』, 2004년 4월 8일.

<sup>61</sup> 『朝日新聞』, 2004년 6월 7일.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비감축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훗카이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 구상에 따르면 훗카이도 일본 육상 자위대 훈련장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병력은 오키나와 미3해병사단 중 포병부대로, 600~7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최북단 훗카이도에는 그 동안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측이 주일 미군재조정과는 별개로 일본 측에 항공자위대 총사령부를 주일 미군 요코다기지 안으로 옮겨달라는 이례적인 부탁을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양국 공군 사령부를 통합융합으로써 항공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간에는 요코스카·사세보(佐世保)기지 공유 등의 연계가 이뤄져 왔으나 이번 구상을 통해 미·일 해·공군의 일체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은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작전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주요 군사 거점이 될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군사허브(hub)’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남방방위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바뀌었다. 일본방위청은 자위대 주력군을 북방에서 규슈·오키나와 등 남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방위전략을 2003년까지 세우기로 했다.<sup>62</sup>

신 방위계획의 골자는 주 방위지역을 북방에서 남방으로 바꾸고, 자

---

<sup>62</sup> 『日本經濟新聞』, 2001년 8월 6일.

위대의 기동력과 통솔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자민당 검토안에는 규슈·오키나와 부대의 증강 항공기와 선박 등 수송능력 대폭강화 장비를 전차에서 장갑차 등 기동성이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극동 러시아군 지상병력이 냉전 말기의 4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국방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대상은 북한이다.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괴선박 영해 침범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자위대와 일본방위청은, 이미 북한을 선제 기동타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2000년에는 해상 자위대가 북한의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호위함에 탑재하는 초계 헬리콥터 부대를 동해쪽의 마이즈루기지 주변에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북방 대신 서남쪽을 중시하겠다는 자위대 재배치 계획은 2010년을 목표로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 자위대 주력 중 하나였던 홋카이도의 제5, 제11사단을 여단급으로 격하하는 반면, 오키나와의 제1혼성단(2,000명 규모)과 시코쿠의 제2혼성단을 여단으로 격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02년에 건조된 2척의 전역기능을 탑재한 최신형 이지스(AEGIS)함을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이즈루기지와 사세보기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 같은 자위대의 재배치는 단기적인 주변 위협증가 외에 일본이 갖는 불안감 때문에 일본의 안보 전문가 20명은 정부 위탁으로 1년간 연구 끝에 2001년 5월 「일본 안전보장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2020년을 예상해 만든 보고서다.<sup>63</sup>

이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통일 후에는 해병대와 공군 중심의 기동부

<sup>63</sup> 「日本經濟新聞」, 2001년 8월 6일.

대로의 군재편이 예상된다. 이 경우 미·일 안보동맹의 재검토가 필요해진다”고 평가,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보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를 ‘국가간 경쟁의식이 강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내셔널리즘이 대두할 우려가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최고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나라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19세기 유럽에 있어서의 독일과 같은 존재’라고 규정했다. 즉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를 위협한 국가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공동연구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계획이 구체화될 것에 대비, 육·해·공군 자위대에 중복되어 있는 지휘명령체계를 통합하고 조직·장비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 5. 군사력 강화

### 가. 중기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방위력 정비에 대하여는 1996년 이후에 관한 신방위대강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삼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sup>64</sup>(1996~2000)을 수행하였다.

이 계획의 방침에 의하면 기간부대와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신방위대강에서 정한 새로운 방위력 수준으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화·효율화·콤팩트화를 추진하였다.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신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의 방공요격능력 부분에서는 장래의 기술적 동향에 대

---

<sup>64</sup> 『防衛白書 1996』, pp. 135-165.



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요격전투기(F-15)를 앞으로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근대화를 위한 시개수(試改修)를 행하였다. 항공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초계 헬리콥터(SH-60J)를 도입하며, 장래의 기술적 수준의 동향에 대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날개 초계기(P-3C)를 앞으로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능력향상을 위한 개수를 하였다. 또한 고정날개 초계기(P-3C)의 후속 기종에 관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함정에 대해서는, 호위함, 잠수함, 소해정, 미사일정 등을 건조하였다. 호위함의 건조에 대해서는 호위함 부대 전반의 효율적인 형태에 유의하면서 갱신·근대화를 추진하였다. 해상과 해안에서의 격파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원전투기(F-1)의 후속기종으로서 새로운 지원전투기(F-2)를 도입하며 계속해서 지대함 미사일(SSM-1)을 도입하였다.

수송력 및 기동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송 헬리콥터(CH-47), 수송함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 초계기(C-1)의 후속 기종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공중급유기의 성능, 운용구상 등 공중급유기능에 관해 검토해서 결론을 얻어 대처하였다.

이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방위관계비 총액의 한도는 1995년 가격으로 대략 25조 1,500억 엔으로 하는 것을 1995년 12월 15일 각료회의에서 확정했다.<sup>65</sup> 일본 정부는 1996년부터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방위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연평균 실질방위비 증가율은 2.1%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별도로 이 기간 중 1,100억 엔을 긴급재난대책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해 사실상 방위비 증가율은 2.2%에 이르렀다.

이 계획은 3년 후(1997)에 그 시점에서 국제정세, 경제재정사정 등의 내외정세를 감안하여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sup>65</sup> 총예산 중 무기 구입비는 4조 2800억 엔이다.

<표 IV-2> 신방위대강: 자위대의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부 대 별		내 용
육상 자위대	육상자위대정원		편성정수 16만명 (예비역 1만5천명 포함) 상비정원 14만 5천명
		평시의 지역배치부대	8개 사단 6개 연단
	기간부대	기동운용부대	1개 기갑사단 1개 특과단 1개 공정단 1개 教導團 1개 헬기단
		지대공미사일부대	8개 高射特科團
	주요장비	전차 특과화력	약 900대 약 900문
해상 자위대	기간부대	對潛·수상함정부대 (기동운영)	4개 호위대군
		對潛·수상함정부대 (지방隊)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육상 對潛機部隊	7개대 6개대 1개 소해대군 13개대
	주요장비	대잠수상함정 잠수함 작전용항공기	약 50척 약 16척 약 170대
항공 자위대	기간부대	항공경계관제부대	8개경계군/20개 경계대
		요격전투기부대 지원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항공수송부대 경계비행부대 지대공미사일부대	9개 비행대 3개 비행대 1개 비행대 3개 비행대 항공경계관제부대에 편입 6개 高射群
	주요장비	작전용항공기 (그중 전투기)	약 499대 (약 300대)

하시모토 총리는 취임 이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재정개혁 등을 6대 개혁 과제로 선정하면서 1997년을 재정재건 원년으로 선포하고 2003년까지 재정적자를 GNP대비 3% 이하로 축소(1997년 4.7%)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 방위력 증강계획(1995~2000)을 수정(1997.12), 투입예산 중 9,200억 엔을 삭감하고 전차(96 → 60대), 장갑차(168 → 157대), 호위함(8 → 7척), F-2 전투기(47 → 45대) 등의 조달 규모를 축소조정하였다.<sup>66</sup>

주일미군 경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197억 엔 적은 2,538억 엔을 편성, 최초로 감축(전년비 7.3%)되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신뢰를 심화시키 나가기 위해 예산을 대폭증액(1997년 2억 1,000만 달러 → 1998년 2조 9,000억 달러), ‘아·태안보세미나’ 등 다각적인 국방교류를 추진하였다.

전력의 재배치와 관련, 유상 자위대는 정원(17만 6,245명)을 5,141명 감축하고 중부 방면대 13사단(7,100명)을 여단(4,100명 규모)으로 재편하였으며, 즉응 예비자위관 2,006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동북 방면대 6사단 神町市 보병연대 등에 배치하였다. 방위청은 장비 고도화 등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정비·보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에 ‘보급본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항공보급처’, ‘함선보급처’를 신설하였다.

1998년도 일본의 방위예산(4.8, 참의원 통과)은 전년에 비해 0.25% 축소된 4조 9,290억 엔(약 400억 달러)으로 기지유지·시설정비와 전투장비 구입분야가 감축되었으나 부대재편을 통한 경량화·기동화와 함께 첨단무기 계속 도입 등 전력증강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었다.

1998년도 방위예산의 특징은 240조 엔에 이르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성역 없이 세출을 삭감한다는 하시모토 정권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고 국제적인 군축 분위기에 부응하면서도, 주요 첨단무기 도입은 전년

<sup>66</sup> 『防衛白書 1998』, pp. 120-133.

수준을 유지, ‘전력의 질적 향상’을 지속 추구함으로써 방위능력 제고와 함께 주변유사사태에 대한 개입여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6월 23일 발표한 1998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동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입각한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질적으로는 군사력을 줄이고 있으나 양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술 운용능력 향상 및 군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67</sup>

## 나.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

2000년에 확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년)은 25조 1,600억 엔 규모이며, 5년 이내에 준항공모함급 호위함과 공중급유기 등의 공격형 장비를 도입, 방위력을 증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sup>68</sup>

새로운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그 동안 전수방위 원칙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준항공급 초계용 헬기 탑재호위함 2척(배수량 3,500t, 1,900억 엔)과 공중급유기 4대(900억 엔)의 도입이 명기됐다.

이와 함께 최신예 미사일 호위함인 이지스함 2척의 추가 도입(2,800억 엔), P3C 대잠수함 초계기 및 C1 수송기의 후계기 개발(3,400억 엔), 정보기술(IT)혁명에 대비한 소형 경량 전차 개발(500억 엔), 전투기 F5의 현대화(250억 엔)등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의혹이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백서 2001』은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간

<sup>67</sup> 『防衛白書 1998』, pp. 46-50, 61-71.

<sup>68</sup> 『防衛白書 2001』, pp. 89-102. □

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 간에 이해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공군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해양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육군은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대만에 대한 직접 침공능력은 한정적이며 해·공군은 질적인 면에서 대만이 우위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목표가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sup>69</sup>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2000년 방위백서보다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 방위백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기술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도 된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구와 고이즈미 총리의 자위권의 연구·검토 지시와 맞물린 결과였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긴축예산을 짜면서도 방위비는 삭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2002년의 긴축예산을 위해 분야별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면서 공공사업·개발원조(ODA) 등을 10% 삭감하기로 했으나 방위비에 대해서는 삭감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2001년 일본의 방위비는 4조 9,218엔이며 방위청이 당초 계획한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보다 0.3% 늘어난 4조 9,388억엔이다.<sup>70</sup>

『방위백서 2002』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정체되어 있던 남북대화 재개(2002.4)에 합의했지만 군사적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신뢰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방비가 급격

<sup>69</sup> 『防衛白書 2001』, p. 60.

<sup>70</sup> 『朝日新聞』, 2001년 8월 8일. 일본방위비가 국내총생산(GNP)에 차지하는 비중은 1% 조금 상회한다. 방위청은 인건비, 식량비 등 고정경비가 방위예산의 45%에 달한다고 하였다.

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예산 총액을 명시하지 않아서 불투명하다면서 경계심을 나타내었다.<sup>71</sup>

『방위백서 2003』은 일본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피침을 상정한 기존의 안보전략과 자위대 장비, 편성의 수정방침을 최초로 공식 천명하였다.<sup>72</sup> 또한 방위청과 자위대과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대량파괴무기,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MD 구축과 자위대의 통합안보역량 강화 및 국제공헌확대 의지 등을 강조하였다. 2003년도 방위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4조 9,265억 엔을 책정하였다.<sup>73</sup>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개발 및 수출 등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위협요인임을 지적하였으며, 주한미군 전차가 훈련 중 일으킨 여중생 사망사고(2002.6) 등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악화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명하였다.<sup>74</sup>

일본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중거리 탄도탄 ‘노동’을 요격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미국으로부터 해상배치(이지스함탑재 SM-3), 지상배치(지대공유도탄 PAC-3) MD를 도입한다는 방침하에 2004년 예산에 1,000억 엔 반영을 최종 결정하였다.<sup>75</sup>

2004년 7월 7일 홍콩의 명보(明報)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핵심으로 양보다 질 위주로 해·공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첨단 군사기술은 일본의 안보

71 『防衛白書 2002』, p. 60.

72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방위계획의 大綱’을 작성하여 새로운 방위력 정비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安全保障と防衛力に 關する懇談會, 『安全保障と防衛力に 關する懇談會』 報告書, 2004年 10月. pp. 29-30.

73 『防衛白書 2003』, p. 104.

74 『防衛白書 2003』, p. 53.

75 『朝日新聞』, 2003년 12월 19일.

에 증대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므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는 또 “중국의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11.6% 늘어난 254억 달러”라고 밝혔다.

일본정부·자민당이 당초 200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2년 앞당겨 작성하기로 한 데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등 급격한 정세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북한·중국 위협론과 맞물린 것이다.

<표 IV-3>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  
주요 장비의 정비 규모

구분	종 류	정 비 규 모
육상 자위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차</li> <li>· 화포(박격포 제외)</li> <li>· 다연발로켓 시스템</li> <li>· 장갑차</li> <li>· 대전차 헬리콥터</li> <li>· 수송 헬리콥터(CH-47JA)</li> <li>· 지대공미사일(호크) 개선 정비</li> <li>· 신중거리지대공 미사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량</li> <li>47량</li> <li>18량</li> <li>129량</li> <li>10량</li> <li>7기</li> <li>0.25개군</li> <li>1.25개군</li> </ul>
해상 자위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위함</li> <li>· 잠수함</li> <li>· 기타</li> <li>· 자위함 건조계</li> <li>· 초계 헬리콥터 (SH-60 및 SH-60J 개선)</li> <li>· 신소해·수송헬리콥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척</li> <li>5척</li> <li>15척</li> <li>25척</li> <li>39기</li> <li>2기</li> </ul>
항공 자위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격전투기(F-15) 근대화 개선</li> <li>· 지원전투기(F-2)</li> <li>· 수송헬리콥터(CH-47J)</li> <li>· 공중에 있어서 항공기에 대한 급유기 능 및 국제협력 활동에도 이용할 수 있는 수송기능의 항공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기</li> <li>47기</li> <li>12기</li> <li>4기</li> </ul>

자민당 헌법 개정 요강안<sup>76</sup>의 최대 특징은 ‘국방군’의 설치다. 현행 헌법은 9조에서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자위대는 23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군대가 아니라 행동에 제약이 많다. 이 때문에 보수세력들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2003년 5월 국회에서 “자위대는 군대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요강은 또 미국 등 동맹국이 전쟁을 할 경우 일본이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상 직접침략을 받을 경우에만 대응하는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면 일본은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세계 곳곳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 진출도 가능하다. 요강은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요강은 또 “외국이 침략하면 총리가 국회 승인을 얻어 ‘국가긴급사태’를 발동하고 지방자치단체·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 “국민은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일제의 군국주의 헌법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조사회는 이 요강을 토대로 자민당 내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하여 2004년에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른 당과 조정작업을 할 방침이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sup>77</sup> 그는 또 개헌의 전제가 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냉전종식 후 일본의 분위기는 크게 변했다. 특히 걸프전쟁 이후 실시된

<sup>76</sup> 『讀賣新聞』, 2003년 6월 28일.

<sup>77</sup> 『毎日新聞』, 2003년 8월 26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찬성여론이 호헌여론을 앞서는 양상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개헌안 마련 지시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 선거전략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국민여론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이 선거쟁점으로 부상하고 총선에서 자민당이 크게 승리하면 임기 중에는 개헌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개헌논의는 급속히 현실성을 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 언론들도 대체로 개헌론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총리의 결단을 지지한다면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은 언제, 헌법전문은 언제, 개정안 전문은 언제까지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정권공약으로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산케이 신문도 자민당은 자주헌법 제정을 당헌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리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개헌안 마련지시가 총재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너무 가볍게 다룬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개헌론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도 헌법에 관한 논의는 환영하지만 총리의 과거 발언과 최근의 처신을 보면 헌법개정 논의의 초점은 9조 개정에 맞춰져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헌법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이라크전과 같은 전쟁에 자위대가 참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헌이 기껏 미국이라는 보안관의 조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노이케 요시타다(鴻地) 일본 구조개혁 특구-방재 담당상은

일본 헌법은 자위대를 군대하고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8</sup> 고노이케 담당상은 효고(兵庫)현 카이바라시(市)에서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적인 해석”이라며 “아무도 것처럼 강력한 군대가 군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으며 헌법에도 그와 같이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노이케 담당상은 최고위법에 그와 같은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계에서도 헌법개정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79</sup> 2003년 9월 20일에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등 입후보자 4명이 무력행사 및 전쟁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9조의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13일 방송사(NHK)토론회에서 자민당 창당 50주년이 되는 오는 2005년까지 당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야당을 포함한 국민적 논의를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 후보는 “평화원칙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가메이 시즈카 후보는 “지금 상태로는 (헌법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기본법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후지오 다카오(藤井) 후보도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위대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일본은 북한핵과 중국의 군사위협을 빌미로 미군의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sup>80</sup>하고 자위대의 군대변신으로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sup>78</sup> 『연합뉴스』, 2003년 9월 13일.

<sup>79</sup> 『연합뉴스』, 2003년 9월 14일.

<sup>80</sup> 고이즈미 총리는 2004년 초에 “내 임기 동안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개헌안을 내기까지는 앞으로 5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4년 5월 3일.



##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중국은 유사법제가 자위대뿐 아니라 주일미군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일동맹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기동성을 높이는 재배치 작업과 맞물린 유사법제 통과를 보는 중국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동북아에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미사일방어(MD)망을 공동 연구·개발 중이고, 자위대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4대인 이지스함도 4대를 더 들여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14년 연속 국방비를 10%대로 늘렸고,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제 수호이-27 전투기의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고, 순항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을 만한 정치·외교적 지렛대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은 현안인 북한 핵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일본의 우경화에 빌미를 주지 않는 한편 주장기적으로 자체적인 군사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대만의 군비확충을 부르고 있다. 신형 프리깃함

도입과 전투기(경국호)의 독자 개발, 신형 지대공미사일 배치는 좋은 예다. 남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한국도 이지스함 등을 들여올 계획이다.

북한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크게 긴장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북핵문제로 인한 국민의 위기감과 미국이 대북압박의 지렛대로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일본의 재무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재무장할 경우, 가장 위협받는 국가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일본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할 가상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내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등 일본 주변에서 전쟁에 돌입할 경우 자위대를 동원해 미국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북한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군국주의 부활’, ‘재침 책동 노골화’로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일본의 재무장을 구실로 핵무기 보유를 역으로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일본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사법제 통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와 직접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일본의 유사법제법안은 공격보다 방어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일본이 과거와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급변한 국제질서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 자국 내의 정치·경제적 여건상 일본은 유사법제에 이어 평화헌법 개정 이후 자위대의 군대변신 수순을 밟을 것으로 한국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심각한 군비증강은 아·태지역국가들의 안보 위협을 자극하여 본격적인 군비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아시아는 세계최대의 무기 구매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보통국가 일본의 등장으로 동북아에서 중·일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막기 힘든 대세임을 인정하되 일본이 보통국가를 넘어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의 세계 패권지위가 유지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안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또한 일본의 군사역할을 관리할 것이므로 한국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하여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미 동맹이 이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군사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을 주축으로 중국까지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재무장으로 인한 중·일간 긴장을 해소한다는 구상도 하여야 한다.<sup>81</sup> 안보대화는 역내 정치·안보적 신뢰 구축과 유사 가능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외교노력이며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공존에 기여하므로 한국은 역내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sup>81</sup> 중국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안전보장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지역안보기구의 창설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004년 2월 25일 보도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동북아 안보협상회의'로 불리는 이 구상은 북한의 미사일은 물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영토분쟁' 등 역내 각국의 관심사를 협의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결국 미국과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일본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반조성 확보를 높이는 군사교류 및 협력을 하고 있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1992년 11월 방한, 국회연설에서 분쟁방지를 위한 아·태지역 안보협의체의 준비단계로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제의하였다. *The Korea Herald*, November 20, 1992.



## 결 론

# VI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군비증강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경계론이 부상하였다. 일본은 냉전 종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두 자리 수로 군비를 증액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 중·일 관계는 과거사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갈등이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적용범위에 대만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중국측의 반발이 지속되었고, 아울러 언제라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경제부문에서는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중·일 관계를 긴장시켜 왔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2004년 3월 27일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자기 나라 전물자를 추도하는데, 왜 외국인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직도 이상하기 그지없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고이즈미는 매년 한 차례씩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치가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고 참배를 강행하는 것이다.

조어도(釣魚島: 중국명 다오위다오, 침각열도, 尖閣列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와 관련한, 중·일간의 갈등은 1990년대 들어와서 양국의 민족주의화와 우경화추세로 인하여 첨예화되었다.

중동지역으로부터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전체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 해로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남사, 서사군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주변의 군사적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은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 대한 공동개발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남사군도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센카쿠섬을 자국의 영토라는 전제하에 공동개발을 제기하고 있어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도 다오위다오섬은 중국의 영토로 해양자원에 대한 일본과의 공동개발은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탈냉전시대 들어 중국은 근해적극방어 및 원양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구축함,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의 전력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일본은 중국이 1992년 영해법 제정에 이어서, 1993년 서사군도에 설치한 임시활주로를 '수호이-27'기종 이상의 전투기와 전폭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군함정박시설을 해군기지로 개조한 데 대해서, 이러한 활주로와 군함정박시설로 서사군도에서 남사군도 및 센카쿠열도까지 작전반경이 확대되었다고 보고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1997년 6월 미·일방위협력지침, 2차 중간보고안에서 미·일은 일본 유사시 주변지역의 범위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및 센카쿠열도의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확대 정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게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방위백서는 1990년 말부터 중국을 위협국가로 꼽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 미국은 이미 2001년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했으며 일본도 2004년도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4년 말 개정예정인 방위계획대강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군사적 위협대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관계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정경분리로서, 많은 갈등관계 속에서도 경제교류는 지속되어 복합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상품수출시장과 투자유치대상으로서 일본을 주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 역시 중국의 생산기지 및 광활한 시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상황은 크게 호전되고 있다. 중국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거품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에 있어서도 일본에 커다란 적자누적으로 경제가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일의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자원과 연료부족, 공해 등 환경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안보 및 아시아의 무기경쟁을 초래하므로 일본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비판론의 초점은 안보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중국의 정책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안보 전략을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1995년의 신방위대강과 1997년의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본은 탈냉전과 그에 따른 세계적 규모의 안보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와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은 1995년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를 골자로 신방위대강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기본적 방위력구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새 방위계획 대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종전과 같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PKO 참여, 대규모 재해와 테러에 대한 대응 등 일본의 국제적인 군사공헌 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미·일 신안보선언 이후 자민당의 국방측 및 자위대의 간부들은 신대강이 평화사에서 유사시로 이행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고,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 신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1997년에 완성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유사개념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펼치는 중심무대가 한반도 등 주변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향후 대만사태의 진전은 중·일 관계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시 취할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성립(1998.5)시켰으며, 미국과 협력 범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이 활발해졌으며, 2003년 6월 6일에는 전쟁 상황에 대비한 유사법제를 마련하였다. 2003년 6월 6일 통과된 유사 3개 법안에 이어 2004년 6월 14일 7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시를 대비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바뀌었다. 일본방위청은 자위대 주력군을 북방에서 규슈·오키나와 등 남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방위전략을 2003년까지 세우기로 했다. 이는 극동 러시아군 지상

병력이 냉전 말기의 4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국방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방위력 정비에 대하여 1996년 이후에 관한 신방위대강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삼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을 수행하였다. 이 계획의 방침에 의하면 기간부대와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신방위대강에서 정한 새로운 방위력 수준으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화·효율화·콤팩트화를 추진하였다.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신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의 방공요격능력 부분에서는 장래의 기술적 동향에 대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요격전투기(F-15)를 앞으로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근대화를 위한 시개수(試改修)를 행하였다. 함정에 대해서는, 호위함, 잠수함, 소해정, 미사일정 등을 건조하였다. 이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방위관계비 총액의 한도는 1995년 가격으로 대략 25조 1,500억 엔으로 하는 것을 1995년 12월 15일 각료회의에서 확정했다.

2000년에 확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년)은 25조 1,600억 엔 규모이며, 5년 이내에 준항공모함급 호위함과 공중급유기 등의 공격형 장비를 도입, 방위력을 증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그 동안 전수방위 원칙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준항공급 초계용 헬기 탑재호위함 2척(배수량 3,500t, 1,900억 엔)과 공중급유기 4대(900억 엔)의 도입이 명기됐다.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견제전략이 일본 우익세력의 북한·중국 위협론과 맞물린 것이다.

2004년 7월 7일 홍콩의 명보(明報)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중국의 군사

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백서는 또 “중국의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11.6% 늘어난 254억 달러”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伸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고 현지 사령관에 육군 대장을 보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태지역 전체의 유사사태에 대응하는 임무를 가진 미1군단이 일본으로 이전되고, 그 동안 소장 직급이 맡아온 주일 육군사령관에 이례적으로 대장이 보임된다면, 주일미군기지의 성격을 일본 방위는 물론 동북아의 유사사태에 대비하는 수준에서 중동지역까지를 시야에 둔 ‘중심(hub)기지’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개헌의 전제가 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냉전종식 후 일본의 분위기는 크게 변했다. 정계에서도 헌법개정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9월 20일에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등 입후보자 4명이 무력행사 및 전쟁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9조의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은 북한핵과 중국의 군사위협을 빌미로 미군의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의 군대변신으로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동북아에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을 만한 정치·외교적 지렛대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은 현안인 북한 핵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일본의 우경화에 빌미를 주지 않는 한편 중장기

적으로 자체적인 군사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대만의 군비확충을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심각한 군비증강은 아·태지역국가들의 안보위협을 자극하여 본격적인 군비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아시아는 세계최대의 무기 구매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보통국가 일본의 등장으로 동북아에서 중·일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패권지위가 유지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안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또한 일본의 군사역할을 관리할 것이므로 한국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하여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을 주축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재무장으로 인한 중·일간 긴장을 해소한다는 구상도 하여야 한다. 안보대회는 역내 정치·안보적 신뢰 구축과 유사 가능성 사전 예방을 위한 외교노력이며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공존에 기여하므로 한국은 역내 안보대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김성철. “일·중관계의 쟁점과 추이.” 『세종정책연구』 2001-9. 성남: 세종연구소, 2001.

오규열. 『중국군사론』. 서울: 지영사, 2000.

손기섭. “일본 가이후 내각의 제3차 대중 엔차관 협력의 동결해제 결정.” 2001년 춘계학술대회. 공동주최: 한국재향군인회, 한미안보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吳建德. 『中國威脅論』. 臺北: 五南圖書出版公司, 1996.

鈴木宗男. 『世界が變わる日本が變わる』. 東京: 講談社, 1992.

防衛協力小委員會. 『日本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たに關する中間とりまとめ』. 東京: 防衛廳, 1997.

安全保障と防衛力に 關する懇談會. 『安全保障と防衛力に 關する懇談會』 □ 報告書. 2004年 10月.

『防衛白書』 1996, 1997, 1998, 2001, 2002, 2003.

第88回国會衆議院會議錄 第4号. 『國務大臣の演說に對する竹入義勝君の質疑』. 昭和 54年 9月 6日.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Zhang, Ming and Montaperto, Ronald N.. *A Triad of Another Kind: The U.S., China and Japan* (N. Y.: St. Martin's Press).

## 2. 논문

최운도. “21세기 일·중 관계의 전망.” 『일본연구논총』 제13호 (여름호, 2001).

張雅君. “中共與美日的亞太海權競爭：潛在的衝突與制度性競爭機制.” 『中國大陸研究』, 第41卷, 第5期 (1998.5).

船橋洋一. “日米安保再定義の全解部.” 『世界』 (1996.5).



渡邊沼夫. “日米安全保障關係の新展開.” 『國際問題』 (1998.3).

Er, Lam Peng. “Japan and The Spratlys Disputer.” *Asian Survey*. Vol. 36, No. 10 (October 1996).

Green, Michael J. and Self, Benjamin L.. “Japan’s Changing China Policy: From Commercial Liberalism to Reluctant Realism.” *Survival*. Vol. 38, No. 2 (1996).

Kanayama, Hisahiro. “The Future Import of Energy Problems in China.” *IIPS Policy Paper*, 124E (June 1994).

Nye, Joseph.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Vol. 89, Winter 1992~93.

Sato, Hadeo. “Japan’s China Perceptions and its Policies in the Alliance with the U.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arch 1998.

Storey, Ian and Ji, Yon. “China’s Aircraft Carrier Ambi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LVII, No. 1 (Winter 2004).

### 3. 기타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朝日新聞』

『産經新聞』

『日本經濟新聞』

『毎日新聞』

『讀賣新聞』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pan Times*

*World Economic Outlook*.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헌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여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정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노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사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p>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년            월            일</p> <p>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